

도의회 예결위, 재정사업현장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익산1) 위원장과 위원들은 8일 익산 이리초등학교 내 '익산발명교육센터'와 전주에 있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찾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와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재정사업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대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익산 이리초등학교에 위치한 '익산발명교육센터' 현장을 방문해 "상상력·창의력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발맞추어 발명 등과 같은 가치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확보가 국가 및 지자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익산발명교육센터의 이점을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개발 등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산발명교육센터 김대중 "지식재산이 경쟁력 핵심요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이상현 "농촌여성 교육·능력개발 대책을"
전북문화관광재단 이현숙 "재단의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을"

최영구 의원(익산4)은 발명교육교육센터 참가자 선발방법과 기준, 도내 발명교육센터 운영현황 등을 묻고, "발명교육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 이수 학생들에게 가산점 부여 및 과학고 등 관련 학교에 진학을 장려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이리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익산발명교육센터를 이리중앙초등학교에 이전하는 사유와 이전 후 센터의 활성화 계획을 묻고, 과학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발명교육의 제

뒤편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 및 능력개발이 특히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들은 전북예술회관에 위치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방문했다.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은 "기금조성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타시도 문화재단 사례를 볼 때,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중 재정사업장 방문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2017년 본예산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강용구, 남원 사매면민 감사패 받아 119지역대 신축 등 기여 공로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지난 7일 남원시 사매면 주민으로부터 안전시설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사매면사무소 신상철 면장은 "사매 119지역대 신축 등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한 재해 및 사건 사고 등의 상황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감사한 마음을 패에 담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사매119지역대는 그동안 사매면사무소 부지 내의 차고지를 사용해왔으며 30년이란 긴 시간이 경과하면서 건물 노후와 공간 협소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남원시와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119지역대 신축을 건의해왔으며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 2016년 9월 공사를 마쳐 지상 2층 규모의 지역대 신축사를 조성했다.

이번 신축사 조성으로 인해 남원시는 사매를 비롯해 남원시 북부권 4개면 뿐만 아니라 임실군 주변 면지역에도 비로소 소방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신광영 기자



"소녀상 철거 이면합의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면합의에 대해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금대섭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됐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대섭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철거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는 없다고 일축해왔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무슨 이유로 소녀상 철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베 총리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정부가 부인해온 이면합의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아베 총리의 이런 요구에 박 대통령이 침묵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면합의가 없다면 박 대통령이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10억엔 컷으로 소녀상 철거하려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요구에 정부가 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 다녔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대섭 대변인은 "결국 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며 "군사비밀도 아니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일인데 이면합의를 하고 또 감했다는 것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 회의에서 "왜 이 정부는 108억원에 역사와 자존심을 판 것인가. 사과와 반성 대신에 돈으로 때우겠다는 일본의 행태에 왜 할 말을 못하는가"라며 "당장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쫓던데 팔아넘기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적 분노에 답해야 한다"며 "이런 담담한 어투를 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보다 일본 정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옆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국회의장 청년단체 타운홀 미팅 '청년에게 듣는다'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양성빈 "전북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입안 시급"

예술인 복지 세미나... 유상우 "사람 있어야... 활동여건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전북 지역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들이 고갈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성빈 도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 개최된 '예술인 복지 세미나'에서 청년예술인들이 지역 예술계 현장으로 끊임없이 투입되고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지만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성빈 의원은 "예술인 복지는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보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라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규정하는 키워드가 문화와 예술인 만큼 도가 예술인 복지와 지위향상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빈 의원은 또 "청년이 모든 정책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술 지원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기존의 신진예술가육성은 지역 예술계에 청년의 활기를 불어넣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예술진흥 유상우 사무처장 역시 "예술

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람이 없다 보니 현실이 막막하게만 보인다"면서 "도의 예술지원 정책도 청년예술인을 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여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술지원 제도가 예술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창운 화가는 "지원신청서 작성, 정산서 구비, 자부담 등 예술지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과도해 예술가의 피로도를 증대시키고 지원효과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람이 없다 보니 현실이 막막하게만 보인다"면서 "도의 예술지원 정책도 청년예술인을 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여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술지원 제도가 예술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창운 화가는 "지원신청서 작성, 정산서 구비, 자부담 등 예술지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과도해 예술가의 피로도를 증대시키고 지원효과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우병우 불출석사유서 제출 대국민·대국회 선전포고 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운영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출석할 것이라 전망에 대해 "우수석의 불출석사유서 제출은 대국민·대국회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어제 우 수석이 국회 운영위 국정 증인으로 채택됐다. 어제 당일부터 우 수석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안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퍼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온갖 의혹을 철저히 덮고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가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불출석 얘기를 돌려 여론을 떠보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

김빠진 '서별관 청문회'... 맹탕·정쟁 예고

최경환·안종범 빠지고, 홍기택 등 채택된 증인들도 대거 불참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서별관 청문회'가 8일부터 열리지만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대거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김빠진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또다른 핵심인사인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새누리당의 강력 지지로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일찌감치 제외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연속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를 이틀간 개최한다.

청문회 증인은 '서별관 회의' 참석자였던 홍기택 전 회장을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

장, 진용섭 금융감독원장, 이동철 현 산업은행장, 강만수·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과 정성립 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46명에 이른다.

하지만 유일호 부총리 등 현직 관료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전직 고위관료나 일반 증인들은 출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행방이 묘연한 홍 전 회장은 청문회에 불출석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어서 '맹탕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핵심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야당 위원들이 주도하는 '호프 청문회'나 여야

간 입씨름만 반복하는 '정쟁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짙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해운업의 불안과 조선업의 문제점 등은 다 이미 예견되고 예고돼 있었는데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가능성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못했으므로 한진과 대우조선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계운경 의원은 "올해 경영진단한 내용도 하나도 주지 않고 숨기고 있다. 단순한 청문회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밝힐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사태를 비판했다.

차에게 국민의당 의원은 홍 전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법상 국회에서 요구한 증인이 안 나오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가 취해질 것 같다"며 홍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또다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스



더민주 도당, 추석 맞아 민생현장 찾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일 오전 민생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전주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반봉현 상인회장을 비롯해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봉현 회장은 "포털푸드 매거지는 늘어난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자칫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할 수 있다"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건의했다.

반 회장은 또한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했다"며 "원래대로 확대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은덕 지역위원장과 황현 도의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시행했던 전통시장 육성법이 새누리당 정권들이 대폭 후퇴하는 바람에 상인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상가를 돌며 미리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 전주시에전문요양원과 김제하늘양로원 등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은덕 전주시갑지역위원장,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김명지 전주시의장, 안명수 사무처장, 정호연 도의원, 오광근·박병술·백영규 전주시의원,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광영 기자

"이정현, 탕평인사도 못하면서 웬 호남연대론"

국민의당 내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호남연대론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8일 YTN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냐는 정당과 호남이라는 지역이 연대를 한다는 개념이 잘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호남을 소외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든지 특정 지역이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독점하고 독식하는 것들은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탕평책이 필요한 시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녁'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의 큰 틀에 동의하겠다는 전제가 된다면 저희야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다른 얘기 없이 호남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현재 국민들의 정치 수준에 비춰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선출된 후에 대통령이 이번 장관 인사에서 지역 균형 인사를 했느냐는 점에 비해 봤을 때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며 "이정현 대표의 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쁘진 않지 않지 그렇다고 해서 진정성을 가진 의미 있는 언동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